



〈암살자(들)〉
영화평
2면

극우 공세
3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구 노동당’의
귀환이라는 환상
6면

여권의 내홍
7면

산부인과 전문의 특별 기고
임신중지약 도입 관련
의료계 제안의 문제점
8, 9면

DMZ 지뢰
폭발 사고
10면



반란의 프랑스
4~5, 12면

암살자(들)

영화평을 만나 보라

관련 기사 2면



영화평 | 〈암살자(들)〉

박정희를 둘러싼 역사 전장이 된 영화, 우파의 공격에 맞서야 한다

영화 〈암살자(들)〉은 9월 23일 개봉하자마자 ‘역사 왜곡’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영화가 ‘박정희가 아내 육영수 살해를 사주했다’는 식으로 왜곡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진우가 앞장섰다. “천인공노할 짓”, “패륜적 범죄”,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을 권양숙 여사가 사주했다는 영화가 나오면 그것도 표현의 자유인가.”

28일부터는 국민의힘 지도부, 박정희기념재단·육영재단·박정희학술원, 우파언론들이 참전했다.

“표현의 자유는 좌파의 전유물인가”(장동혁), “육영수서거역사왜곡처벌법을 만들거나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없애라”(나경원), “5·18은 성역이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는 다시 쓰는가”(이진숙),

“피해자를 가해자인듯 몰았다… 영화계, 현대사 끊임없이 왜곡”, “들끓는 2030… 암살자(들)은 역사왜곡”(조선일보)

“패륜”, “역사 왜곡”,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전투에 나서라고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

9월 초부터 국힘 지지율이 여당을 앞서거나 비슷해졌다. 28일 전후에 이런 기세를 바탕으로 외교·안보(북한군 포로, DMZ 지뢰) 사안에서 극우의 탄력이 불고 있었다. 그 와중에 〈암살자(들)〉을 인질 삼아 ‘좌파 역사관’과 ‘문화 권력’까지 공격 대상으로 엮어 우파들을 고무·결집시킨 것이다.

사실 그동안 성공한 한국 상업 영화 중 우파 입맛에 맞는 영화가 거의 없었다. 자본가들은 주로 수익성을 보고 투자했는데 결과가 그랬다. CJ 그룹이 회장 이재현이 구속된 후 박근혜 정부에게 영화 〈국제시장〉을 제작해 ‘천만 영화’로 만들어 준 배경이다.

극우와 우파에겐 할리우드가 더 낫겠지만,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나 〈오디세이〉는 꼭 그렇지도 않다. 2020년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을 때, 기분 상한 트럼프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되찾자!”고 외쳤다. 〈바람과…〉는 노예제를 찬양하고 ‘잃어버린’ 과거 ‘전통적’ 백인



배우까지 캔슬하려는 미친 자들

의 미국 신화를 성공적으로 조작했던 영화지만, 당대 최고 흥행작이었다.

국제적으로도 극우와 그 정치인들이 벌이는 ‘역사 전쟁’, ‘문화 전쟁’은 사회를 더욱 우경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진숙의 기자회견문에는 그 본심이 잘 나온다.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고 국민들을 가난에서 탈출시켰던 위대한 지도자를 기어이 독재자로, 또 배우자 살해의 배후에 있을지도 모를 패륜적 인물로 만들려는 것인가.”

진정한 민주주의에는 어렵도 없는 자유민주주의조차 거추장스럽게 여겼을 뿐 아니라 실제로 기초적인 민주적 권리들과 그것을 요구하던 사람들을 짓밟아버린 자들(이승만, 박정희, 전두환)과 그렇게 하려다 실패한 자(윤석열)를 찬양·옹호·추종하는 자들(과 그런 자들을 동료로 둔 자들)의 입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소리일 것이다.

하지만 무시해선 안 된다. 현재까지 공격은 성공적으로 보이며, 따라서 극우들에게 결집력을 주고 있다. 윤에게인 극우 행동가들이 배우 유해진의 집 앞에 한 달 치 집회 신고를 냈다. 국힘은 영화 상영 중단과 감독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한다. 문화예술계 종사자들과 문화산업 자본가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다. 하지만 공격의 영향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미칠 것이다.

전에는 이런 공격이 대단치 않았다.

영화 흥행에 도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극우가 계속 성장했다. 마·중 경쟁 고조, 다중 위기, 이재명 정부의 내란 청산 부진과 개혁 배신 등이 극우를 독려하고 고무한다.

“패륜, 왜곡”?

이 영화에 “박정희가 육영수 살해를 사주했다”는 설정이나 관점은 없다.

보는 사람에 따라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설정이나 관점이 있긴 하지만, 허진호 감독은 의도한 게 아니라고 한다. 영화상으로도 그는 박정희가 아니라 “중정의 뒷선”을 의심한다.

다만, 그건 추론의 약점 같다. 중정의 뒷선이 박정희가 아니고 다른 누구일까? 주요 인물인 김재환 기자(박해일 분)는 박정희 암살 시도 또는 암살 “소동극”이 한일 협정과 그에 따른 차관에 경제적 이익이 걸린 세력들과 연관된 음모가 아닌지 의심한다. 일본에서 수입한 지하철 전동차 가격이 2배였던 것이 한일간 리베이트로 의심됐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하필 박정희 또는 육영수 암살(극)을 할 개연성은 낮다. 그렇게까지 보는 것은 너무 과하게 만사가 위로부터 조작된다는 관점일 수 있다.

불과 1년 전 도쿄 한복판에서 있었던 김대중 납치·살해 기도 사건(중정부장 이후락이 박정희의 ‘윤허’ 없이



행한 과잉 충성 행동인지 박정희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과, 항상 박정희가 충신들을 치열하게 경쟁시키는 방식으로 (마치 히틀러가 그렇게 했듯이) 자신을 지배 구조의 정점으로 유지해왔다는 사실 때문에, 위로부터의 음모에 대한 의심은 이해할 만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영화가 훨씬 중요한 문제들에서 옳다는 점이다. 이 영화는 박정희 정권이 부패하고 잔혹한 독재 권력임을 보여준다(옳다). 박정희와 국가가 검열, 조작, 협박, 납치, 처형 등 온갖 “천인공노할 짓”과 “패륜적 범죄”를 저질렀음을 “왜곡”없이 보여준다(완전히 옳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저항에 나섰고 정의에 헌신했던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강조한다(중요하게 옳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든지 우리를 억압하려고 벌였던 악행들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중요하다. 널리 알려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비추어 현재와 미래의 일도 의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파의 노력을 설명해줄 이 말을, 우리도 유념해야 한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조지 오웰, 《1984》)

반면, 개혁 흥내와 국힘 흠집내기 수준 정도로만 진행되는 민주당 정부의 과거사 진상 규명은 늘 미진했고 민주당의 역사관도 진실에 너무 불충하거나 부적절하다.

김현진

본지 웹사이트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대북 강경론에서 영화 검열까지 ...

거침없는 극우 공세

이재명의 중도 보수 노선과 반우파 투쟁의 공백

10월 3일 낮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두 개의 우파 집회는 최근 우파의 사기가 올랐음을 보여 줬다.

송레문 앞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가한 집회(약 1만 명)가 열렸고, 광화문 사거리 쪽에서는 이재명 하야를 주장하는 전광훈 주도 극우 연합 집회(약 4만 명)가 열렸다.

최근 국힘은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 위기를 파고들어 파상 공세를 펼치며 정국 주도권을 잡았다. 공식정치에서의 극우 공세가 기층 극우의 성공적인 동원으로 이어진 것이다.

최근 영화 암살자(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등에 대한 공세는 우파의 저열함과 야비함을 보여 준다. 그러나 그런 공격은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다.

군사분계선(MDL) 자체가 수십 년간 불명확했다. 유엔사·한국군 모두 북한이 설정한 군사분계선을 정확히 모른다. 심지어 유엔사와 한국군이 설정한 선도 다르다. 애초 ‘월경’이라는 규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국힘과 우파의 주장은 ‘답정너’이다. 안보 위기를 빌미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면서 김정은 참수부대 훈련,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요구한다.

윤석열의 “힘에 의한 평화” 노선의 재탕이다. 비상계엄 선포의 빌미를 만들려고 대북 불장난을 벌인 것이 윤석열의 외환죄 재판으로 이어졌는데, 우파들은 이때로 돌아가자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압박 속에서 10월 5일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와 유엔사는 북한군의 월경에 의한 지뢰 매설이 사고 원인이라고 발표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힘은 10월 4일 벌어진 시중은행 해킹 사건도 대변에 북한 소행이라고 단정짓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온통 ‘윤어게인’이 벌어지는 것이다.

국힘과 우파는 박정희 유신 체제의 반동성을 비판적으로 드러낸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서도 음모론이라는 꼬투리를 잡아 영화 제작진, 배우, 투자 기업 등에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이제는 극장 상영 중단까지 요구한다.

‘박정희 신화’는 우파의 강력한 무기



이런 자들이 설치게 만드는 주된 책임은 여권에 있다

다. 이런 무기에 기스라도 나면 안 된다는 ‘역사 전쟁’이다.

그런데 우파는 한 술 더 떠 평범한 대중에게까지 검열·위축 효과를 내려 한다.

국힘은 각 시·도 교육청에 학생 단체관람 현황 보고도 요구했다. 개봉 일주일 된 시점이니 검열 효과를 노린 것이다.

제작 투자자들과 관람 후원 기업에까지 시비를 건다.

윤석열의 ‘따까리 검사’ 출신 주진우는 유 배우 얼굴이 “북한 [얼굴] 상”이라고 모욕한다. 단순한 외모 비하가 아니라 색깔론이자 북한 출신 주민에 대한 차별적 편견을 조장하는 악질적 언행이다.

윤어게인과 김상진, 안정권은 유해진 배우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예고된 무대 인사 등이 취소됐고, 국힘은 국내는 물론 해외 영화제에까지 상영 취소를 요구한다.

넓어지는 극우의 활동 반경

극우화한 국힘은 윤석열은 물론이고 박근혜 파면까지도 시간을 되돌릴 기세다.

지금 국힘 내 극우파들은 1987년 이후 공식정치에서의 금기를 하나씩 건드리며 경계선을 넓히고 있다. 처음에는 “표현의 자유” 운운하지만 진보측 저항이 변변찮자 본심을 노골적으로 말하는 식이다.

극우 이진숙은 학술 토론 형식으로 5·18 북한군 투입 의혹을 제기하더니, 곧이어 5·18을 직접 비난하는 국회 집회를 열었다. 이제 김태규가 나서 박정희·전두환의 쿠데타들이 내란이 아니라고 했다.

‘전 어게인’이 ‘유신 어게인’, ‘5·16어게인’으로까지 거슬러 가는 망발이다.

공식정치에서 극우 활동 반경의 확장은 사회 전체에서 우파 목소리에 힘을 실어 준다.

지난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튀어나온 극우의 혐증 캠페인은 중국 국적의 중국동포에 대한 공격을 넘어 탈북민으로 향하는 조짐이 있다. 주진우의 “북한 [얼굴] 상” 발언은 최근 서울 강서구에서 국힘 지역 조직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여명학교(탈북민 학교) 퇴출 캠페인과도 겹쳐 보인다.

극우 공세의 과격함과 야비함이 점증하고 강해져 누가 집권당인지 모를 정도가 됐다. 이런 상황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었다. 기업들을 위한 정치 안정을 우선시하며 중도보수화 노선을 펴 온 이재명 정부의 선택과 행보가 자초한 면이 크다.

첫째, ‘중도보수 확장’을 통한 구조적 다수 운운하며 우파를 껴안고 내란 청산, 극우 척결, 사회 개혁에 전혀 진정성 있게 임하지 않았다. 좌파를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쿠데타에 연루된 자들은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으로 되고 대구시장도 되고 승진도 하는데, 그 쿠데타가

제거하려던 활동가들은 주변화되거나 국가보안법 수사 대상이 됐다.

둘째, 정부가 자주 국방, K방산, 메가프로젝트 총력전 등 친기업·친제국주의 노선에 매진하면서 기업·시장·주주·성장·군사주의 등 보수적 가치에 힘을 실었다. 당연히 사회 개혁은 후순위로 밀렸고, 이제는 노동 개악 추진, 파병 추진, 국가보안법 탄압을 벌인다.

이재명의 국정수행 긍정평가와 민주당 지지율 모두 올해 4월에 정점을 찍고 5월부터 이미 하락하고 있었다. 내란 청산과 개혁 부진으로 지지층을 실망시킨 결과다.

지지율 위기로 위축된 상황에서 안보 위기 쟁점도 두드러지자 우파의 압력에 더욱 취약해졌다.

안보·경제 위기 때 우파와 중도 자유주의 모두 기성 질서와 기성(정치·경제) 권력자들을 보호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파는 중도 자유주의에게도 반공·반북과 권위주의적 서민 통제 확대를 요구한다. 체제 수호의 일관성과 진정성을 보이려는 것이다. 목적·목표가 같기 때문에 중도 자유주의는 우파의 요구에 일관되게 맞설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대중 영화에 대한 검열 효과를 방지하고, 표현의 자유 방어도 제대로 안/못 한다. 진보 교육감들조차 국힘의 영화 단체 관람 실태 보고 요구에 반동적 검열이라고 반발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

오히려 노동 개악과 파병 추진, 국가보안법 탄압을 벌인다.

중도보수화로 극우를 고립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망상임이 거듭 입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의 민중전선을 지속하려는 쪽이든, 민주당과의 선거적 차별화에 더 관심 있는 쪽이든 주류 좌파들은 대중을 반우파 투쟁에 동원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을 비판하기는 하지만, 투쟁을 통한 기층 세력 강화로 나아가지는 않고 있다.

김문성

본지 웹사이트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프랑스 교사 인터뷰

“장기 파업의 조건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교사 니콜라 씨의 학교는 파리 북동부에 있다. 이곳 학생들은 지난 10월 1일 목요일과 2일 금요일 교문을 봉쇄했다.

청소년들이 ‘폭동’을 일으킨다고 비난하는 어른들을 보면 교사로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학교에서 10월 1~2일 봉쇄는 다수의 참여로 이뤄졌고 아주 잘 조직됐고 다양한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순조로웠고 아침에는 경찰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급 자녀와 유색인 학생이 더 많은 직업계 고등학교들에서는 탄압이 혹독했습니다.

그 학생들의 봉쇄 시도는 저지됐고 상황이 고약하게 흘러갔습니다. 그 학생들은 자신들이 소외되고 내팽개쳐졌다고 느끼는데, 그렇게 느낄 만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처지에 분노합니다.

그럼에도 언론들은 그들에게 “폭도” 딱지를 붙였고 SNS에서는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폭도가 온다”, “저들은 무기를 갖고 있다.”

우리 학생들과 동료들 일부도 겁에 질렸습니다. 실제로 그 청년들이 학교에 당도했을 때, 일부는 폭죽을 들고 왔고 어떤 이들은 쓰레기통에 불을 지르려 했습니다. 2018년에 시작된 생계난 항의 운동인 노란 조끼 운동 때와 똑같았습니다.

그 학생들은 경찰과 맞붙으려 했습니다. 동네에서 일상적으로 그들한테 괴롭힘을 당했으니까요. 경찰은 학생들을 향해 돌격하고 최루가스를 쏘면서 상황을 더 격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 관해 학생



“모두를 위한 무상 교육! [외국인] 차등 등록금 반대!”

들, 동료 교사들과 토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과 연대하는 입장을 채택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때때로 폭력으로 표출되는 분노는 학교 시스템이 파괴된 결과다. 학교 시스템은 학생들을 사회적 지위에 따라 선별하고 분류하기 위한 폭력적 도구가 되고 있다.

“탄압에 맞서는 최선의 방법은 단결과 연대다.”

학교에서 교직원 파업은 어떻게 조직됩니까?

저희 학교에서는 노조들이 단결하는 전통이 강합니다. 매달 40명 넘게 참석하는 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9일 화요일 파업도 거기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루 행동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도 결의문을 통

해 밝혔습니다.

우리 중 약 50퍼센트가 9월 29일 파업을 하고 자체 제작한 현수막을 들고 거대한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이후 상황이 변했습니다. 10월 1일, 지역 노조 연합은 아침 일찍 고등학교 앞으로 나와 학생들을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응했습니다. 활동가들뿐 아니라, 학교에 도착해서야 등교 중단령이 내린 것을 알게 된 동료들도 호소에 응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학생들을 지원하면서 학생들의 조직화와 요구가 만만찮음을 두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저처럼 그들도 학생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화요일 파업에 참가하지 않았던 여러 동료들이 이제 연대 파업에 나설 태세가 됐다고 말합니다.

단체로 토론하기가 쉽지 않았습다. 10월 1~2일에 카페에서 몇 차례 총회를 열었지만 때때로 회의를 중단하고 학생들을 도우러 가야 했습니다.

전국 노조들은 10월 6일 화요일에 파업을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이를 지지하지만 우리 중 몇몇은 월요일부터 파업을 시작하고, 장기 파업을 위한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월 5일 월요일부터 파업에 나서기로 결정했지만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말을 경과하면서 시위가 금지되자 많은 동료들이 파업에 참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주말을 경과하면서 월요일에 등교 금지령이 내리고 인근 시위가 금지되고 그 일대에 드론이 날아다닐 것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동료들이 파업에 참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 파업을 내키지 않아 했던 한 동료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저도 이런 결정에 분노합니다. 저는 월요일에 파업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학교 교직원들과도 연락망을 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행동을 논의할 파리 수준의 총회를 소집하자고 파리 지역 노조 조직들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커밀라 로일

본지 웹사이트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출처 Camilla Royle in Paris, 'French teacher says 'Conditions are ripe for long strikes' as protests spread' (2026. 10. 4) / 번역 김중환



“분노한 학생들, 연대하는 교사들, 겪는 고통은 하나다”

저항에 나선 프랑스 고등학생들을 만나다

“우리는 새파랗고 독하고 혁명적이다”

어떤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너무 어려서 뭣도 모른다고 말한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 커밀라 로일이 파리에서 학교 봉쇄에 나선 고등학생들을 만났다.

10월 5일 월요일 아침 7시 반, 파리 중심부에 있는 한 고등학교가 이른 시간부터 수십 명의 청소년들로 봉쇄돼 있었다.

상당수가 온통 검은 옷차림을 한 학생들은 바퀴 달린 녹색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끌어다 학교 정문과 후문을 틀어막았다.

일부는 이렇게 구호를 외쳤다. “우리는 새파랗고 독하고 혁명적이다.” 또 다른 이들은 쓰레기통 위에 앉아 힙합 음악을 들었다.

학생들이 골판지로 만든 팻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선생님,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파업에 동참하세요,” “방리유[가난한 교외 지역] 고등학생들을 지지하라.”

한 학생은 알제리 깃발을 펼쳤고, 또 다른 학생은 팔레스타인 깃발을 흔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너무 어려서 뭣도 모른다고 말한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자신의 처지를 너무 잘 안다.

“교사 수가 늘어나야 하고 교육 환경이 개선돼야 해요.” 마엘 군이 기자에게 말했다.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요. 교실 온도가 섭씨 42도까지 올라 시험 기간을 6월에 서 9월로 미루기도 했습니다.

“이 봉쇄는 연대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 학교보다 여건이 10배나 더 나쁜 고등학교도 수두룩해요.”

마엘 군은 이렇게 덧붙였다. “저들은 1968년 5월[노동자 1,000만 명의 총파업]을 기념하고, 우리도 학교에서 그 사건을 배워요. 하지만 우리가 똑같이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죠.”

학교 봉쇄 운동은 파리 북부의 생드



“선생님들은 학생을 믿고 파업하세요!”

니 같은 가난한 교외 지역인 방리유에서 시작됐다. 방리유의 학교들은 벽이 허물어지고 있고, 쥐가 끓고, 변기가 막히기 일쑤다. 바리케이드를 지키는 또 다른 청소년 조아킴 군은 이렇게 말했다.

“방리유 고등학교들의 교육 여건은 재앙적이에요.

“우리 학교는 그나마 낫지만 결코 좋다고 할 수 없어요. 저는 1학년 내내 영어 수업을 못 들었어요.”

조아킴은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 선택지를 좌우하는 대입 제도 파르쿠르 쉬프에도 분노를 표했다.

“사람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학생을 선발해요. 성적을 종합적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많은 학생들은 경찰에게서 괴롭힘을 당한다고 증언했다. 경찰이 학교 상공에 드론을 띄워 자신들을 감시한다고도 했다.

모든 학생들이 한결같이 파리 교외 청소년들과의 연대를 얘기했다. 그 청소년들은 시위에 나섰다가 경찰 폭력에 직면했다.

같은 날, 프랑스 북부 랑스 시(市)에서 15살 학생이 경찰이 쏜 섬광탄을 주웠다가 한 쪽 손을 잃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마엘 군은 이렇게 전했다.

“그 학생들이 받는 탄압은 엄청나요.

“경찰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한 명을 의사시키려 했어요.”

또 다른 학생인 엘리아 군은 경찰이 학생들의 폭력을 유도한다고 전했다.

“상황을 고조시키는 것은 저들이에요.” 엘리아 군은 공립학교 예산이 제자리인데 군비는 갑절이 났다고 지적한다.

군비는 갑절

프랑스와 유럽 전역에서 극우가 부상하는 것에도 우려를 표했다.

“조르자 멜로니가 집권한 이탈리아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 그들은 성소수자 권리를 억누르고 이민자를 탄압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곧장 우리에게 닥칠 것이고 우리는 정말로 목숨의 위협을 느껴요.

“극우는 정상적인 정치 세력으로 자리 잡았고 심지어 젊은 사람들도 그들에게 투표해요. 신나치가 백주 대낮에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이 전보다 커졌어요. 집 밖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길 건너편에서는 학부모들이 모여 학생들을 지켜봤다. 일부는 노조 조끼를 입거나 배지를 달고 있었고, 주요 노조 연맹들이 긴축에 반대하고 고등학생을 지지하며 다음 날로 정한 파업에 참가할 계획이었다.

또 다른 학생인 로맹 군은 이렇게 말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우리를 지지해요. 다른 학부모들은 반대하죠. 교사들은 진짜 우리 편이에요.”

한 노동총동맹(CGT) 조합원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 아들이 저 안에 있어서 왔습니다.

“이 운동은 이길 수 있습니다. 저들이 경찰을 투입한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합니다. 이곳에서, 스페인에서, 모든 곳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조합원은 이렇게 덧붙였다.

“만약 노동자 운동이 가세한다면 판도를 크게 바꿀 것입니다.”

그는 노조 관료들이 너무 굼뜨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 관료들은 10월 6일 화요일에 파업과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운동의 위력이 그들의 등을 떠민 것”이라고 그 조합원은 설명했다.

좌파 정당 라프레(L'Après)[불복종 프랑스에서 갈라져 나온 정당] 소속의 다니엘 시모네 하원의원이 학생 시위에 가세했다.

그녀는 기자에게 정부가 운동을 억누르려고 등교를 중지시키고 수업을 온라인으로 돌리려 했다고 전했다.

“학생들이 봉쇄할 때마다 여기에 옵니다. 내일은 하얀 헬멧을 쓰고 하얀 완장을 차고 올 것입니다.” 하얀 헬멧과 완장은 학생들과 연대한다는 상징이다.

교외의 학교에서 일하는 이만 씨는 이렇게 말했다.

“교육 여건이 정말 나쁩니다.

“미래 세대가 그런 환경 속에 놓여서는 안 됩니다.

“이런 조건을 더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학생과 노동자들이 힘을 합치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우리뿐입니다.”

출처 Camilla Royle in Paris, ‘Meet the pupils’ blockade—‘We are young, determined and revolutionary’ (2026. 10. 05) / 번역 김종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구 노동당'의 귀환이라는 환상

[]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 연대> 편집부가 넣은 것이다.

영국 노동당 총리 앤디 버넘이 연례 당대회에서 한 연설은 그가 키어 스타머를 외과 수술하듯 깔끔하게 몰아냈을 때 이미 분명했던 사실을 새삼 확인시켜 줬다. 온갖 감상적인 연사를 걷어내고 보면 버넘은 대담하고 영리한 정치인이다. 그럼에도 그가 추구하는 것은 진정한 사회주의 정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버넘은 2024년 7월 총선 결과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음을 보여 줬다. 당시 스타머가 얻은 압도적 과반 승리는 신기루였다. 1945년 클레멘트 애틀리, 1966년 해럴드 윌슨, 1997년 토니 블레어가 거둔 진정한 노동당 압승과는 비교가 안 된다. 2024년에 의석이 크게 이동한 것은 정당 지지가 나뉠 때 단순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결과였다.

노동당, 보수당, 영국개혁당[나이절 퍼라지가 이끄는 극우 정당], 자유민주당, 녹색당의 5당 체제가 등장했다. 스코틀랜드국민당(SNP)과 플라이드 컴리[웨일스 민족주의 정당]까지 치면 사실 7당 체제이지만, 이 두 당은 영국 중앙정부를 차지하려고 경쟁하지 않는다. 이런 구도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야비하고 무능한 스타머 정부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패배하는지를 보여 줬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그런데 2월 고튼엔텐트[맨체스터의 노동당 텃밭 지역구] 보궐선거 결과는 여기에 새로운 요소를 보탤었다. 당시 녹색당의 승리는 스타머 몰락의 주된 수혜자가 꼭 극우여야 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 줬다. 진보적 대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버넘은 노동당이 바로 그 구실을 하도록 새 단장 시키려 한다.

버넘은 연설에서 1980년대 마거릿 대처 정부가 영국 사회를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한 것을 거듭 비판했다. 이는 케미 베이드녹 대표 하의 보수당이 대처주의 쪽으로 급격히 움직이는 것과 대립각을 세우는 데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버넘은 미사여구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대안 세 가지를 내놓았다. 첫째, 국민보건서비스(NHS)에 견줄 만한 '국민돌봄서비스'를 신설해 처참한 사회적 돌봄의 실태를 끝내겠다는 것이다. 둘째, 선거제도 개혁을 다룰 전국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



사진 출처: Andy Burnham (SNS)

새 노동당 총리 버넘은 전임자 스타머보다 좌파적 연사를 하면서 실제 변화는 최소화하려 한다

이다. 셋째, 유럽연합과 "영국의 장기적 관계" 문제를 다루겠다는 것이다. 버넘은 여기에 어쩌면 유럽연합 재가입도 포함될 수 있다고 이후 밝혔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로버트 슈림슬리가 지적했듯 이런 공약에는 "기민한 정치 전략"이 담겨 있다. "왼쪽에서 선거 연합을 재건한 뒤, 선거제도 개혁이 우파의 집권을 막아줄 것이라는 노골적인 기대 아래 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여론조사를 보면 영국개혁당은 더는 선두가 아니다. 그리고 퍼라지가 총리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전략 투표를 할 의향이 있는 중도좌파 성향 유권자가 많다. 버넘의 정책 묶음이 논리적으로 향하는 길은, 선거제도 개혁과 유럽연합 재가입을 모두 열렬히 지지하는 자유민주당과의 연립이다.

은 쪽을 따라 인상될 테지만, 평균임금 상승률과는 더는 긴밀하게 연동되지 않게 될 것이다.

녹색당 지지 경제학자 제임스 미드웨이는 이렇게 지적한다. "이것은 사회적 돌봄 비용을 대려고 미래의 연금 수령액을 삭감하는 것이다. 다소 퇴행적인 공산이 크다. 돌봄 비용 때문에 집을 팔 필요가 없어지는 사람들은 득을 볼 것이다. 반면 자가 보유자가 아니거나 돌봄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연금 개혁으로 손해를 볼 것이다."

영리한 수이기는 하다. 삼중 잠금을 깨면 가난한 연금 생활자들이 고통을 겪겠지만, 그것은 여러 해 뒤의 일이다. 게다가 이것은 대기업들과, 대기업들의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BBC와 재정연구소(IFS)가 목청 높여 요구해 온 것이기도 하다. 버넘은 복지 지출 문제에서 자신이 '강경'할 수 있다는 신호를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다.

버넘이 추진하고 있는 종류의 정책 전환은 여러모로 그의 외무장관 에드 밀러밴드가 개척한 길이다. 밀러밴드는 점령지 팔레스타인 내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과의 교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그 발표는 엄청난 소란을 일으켰는데, 주로 이스라엘이 격하게 반발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밀러밴드는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영국-이스라엘의 경제·안보 관계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어조는 극적으로 바뀌되 현실은 최소한으로만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버넘의 수법이다. 이럴수록 진정한 좌파적 대안이 더한층 시급히 필요해진다.

번역 김종환

공개 토론회

관심 있는 주제, 가까운 지역을 찾아 보세요

더 많은 공개 토론회
상세 정보



장기화되는 이란 전쟁과 한국군 파병 문제 — '전쟁 관여'는 정말 없을까?

일시 10월 8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 한국열린평생교육원 5층 강의실 (부평역1번출구 앞 50미터)

발제 김영익 <이스라엘의 인종 청소 실패와 팔레스타인 해방의 전망> 공저자

참가비 5,000원 (학생·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인천 지역모임 문의 010-6224-2157 / incheon@ws.or.kr

이재명 정부의 위기와 극우의 공세 — 좌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일시 10월 14일(수) 오후 7시 30분

※ 전문통역사의 영어 동시통역 제공

장소 서울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PLATFORM P2층 다목적실 (홍대입구역 4번, 7번 출구 도보 5분)

발제 김문성 <친위 쿠데타, 극우정치, 민주주의> 공저자, <노동자 연대> 기자

참가비 4,000원 (학생·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 서부 지역모임 문의 010-8074-2793 / s-west@ws.or.kr

이재명 정부의 위기와 극우의 공세 — 좌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일시 10월 15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 바인그룹빌딩 10층 1004호 (신설동역 3번출구에서 도보 1분)

발제 김문성 <친위 쿠데타, 극우정치, 민주주의> 공저자, <노동자 연대> 기자

참가비 5,000원 (학생·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 동부 지역모임 문의 010-5731-7299 / s-east@ws.or.kr

전략

슈림슬리는 또 "새로운 앤디는 '구(舊) 노동당'[신자유주의를 적극 수용한 블레어의 '신노동당' 이전의 노동당] 노선을 천명"해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싶어한다고도 했다. 아마도 1950~1960년대의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는 뜻일 것이다. 터무니없는 말이다. 버넘은 사회적 돌봄 개혁의 재원 일부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 보호 장치인 '삼중 잠금'[연금을 해마다 물가 상승률, 평균 임금 상승률, 2.5퍼센트 중 가장 높은 것만큼 올리는 제도를 손보자고 한다. 그의 안대로라면 2030년 4월 이후에도 연금 수령액은 물가 상승률 혹은 2.5퍼센트 중 높

여권 내홍

이재명과 반명파 어느 한쪽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대중투쟁이 극우에 맞설 진정한 희망이다

여권 내홍이 걷잡히지 않고 있다. 표면적인 대립 쟁점은 검찰개혁이다. 최초 갈등은 수사권·기소권 분리, 특히 검찰 수사 보완(요구)권 관련 입법 문제였다. 지금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 문제로 번졌다.

이번 내홍의 특이점은 같은 진영 안에서 대통령까지 참전해 공개적으로 난타전을 벌인다는 점이다. ‘적 앞에서의 내부 총질’은 단순한 의견 대립이 아니라 상호 불신과 심리적인 연대 붕괴를 보여 준다.

유시민은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했다”고 직격했다. 김여준, 추미애, 김용민, 조국혁신당이 이 편에서 있다.

이재명은 이들이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무국파”(“무책임 극단주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표 김민석도 “노무현 탄핵의 전조”를 말하며 ‘검찰 개혁 선명파’를 압박했다.

노동계급의 관점에서 보면, 검찰개혁은 착취·억압의 완화를 가져오지 않으므로 부차적이고 사소한 문제다. 그래서 검찰권 축소를 지지도 반대도 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검찰 권한을 경찰로 이전하는 것으로는 민주적 권리 확대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나 정국 운영 주도권과 차기 공천권 등 권력 투쟁을 벌이는 여권 정치인들에게는 검찰개혁이 ‘너 죽고 나 사는’ 쟁점이 됐다.

본지는 몇 달 전에 이렇게 전망했다.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개혁은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하는 안으로,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첨예한 데다 인력 공백과 현장 혼선 우려가 크다. 초기 혼란이 발생하면 지지율 하락으로 직결된다.”(최일봉, ‘이재명 정부 행적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 본다’, 591호, 6월 28일 자)

여권 내홍의 근본 원인은 이재명의 정치적 위기다. 이것이 현재 정치 상황의 핵심이다.

이재명의 지지율 하락이 멈추지 않는 것은 대중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국힘의 재기는 이재명 정부의 개혁 배신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뜻이다. 개혁 약속을 거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이재명은 노동계와 여성계, 진보 정당들이 요구해온 몇몇 의제들(임신중지약 도입, 결선투표제, 사회적 대화 등)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사회 개혁 추진으로의 정책 방향 선회라기보다 일종의 위기 타개용 ‘미끼’들이었다.

실제로 이재명 국정 운영의 무게중심은 사회 개혁을 향해 있지 않다. 이란 전쟁 파병 추진, 경찰의 보안법 탄압 수수방관, 메가특구특별법, 성과급 요구를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기, 중도 보수 지향 개각 등등. 그리고 급기야 여권 내부에서 ‘친윤 검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김지용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냈다.

그렇다고 해서 ‘반명파’가 철저한 진보적 개혁론자인 것은 아니다. 유시민 등은 검찰개혁을 두고 이재명과 대립각을 세우지만 이란 전쟁 파병, 보안법 탄압, 노동자들의 교섭권·파업권 제약 등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추미애도 경기도에서 건축 재정을 추진해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들의 임금이 체불될 위기에 있다.(조국혁신당은 당론으로 파병을 반대하고 있긴 하지만, 그들의 주요 관심사도 검찰개혁이다.)

〈한겨레〉에서도 여권에 대한 쓴소리가 나왔다. 이정애 논설위원은 이

렇게 비판했다. “이런 모습을 아무리 ‘개혁 방향을 둘러싼 노선 투쟁’이라는 말로 포장해 본들 국민들에게는 정국 운영 주도권 다툼, 차기 공천권 나아가 미래 권력을 다투는 권력 싸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긴들 국민의 삶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다. 대통령의 ‘반성’ 기자회견 이후에도 국정수행 지지도가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민주당 지지율마저 하락한 것은 국민적 피로감과 냉소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이런 판국에 진보당은 공소청·기소청 출범을 두고 “주권자 국민이 이뤄낸 결실!”이라고 평했다. 진보당은 그전부터 이재명 vs. 검찰개혁 선명파 대립에서 이재명을 편들었다. 이재명과 동맹하면서부터 진보당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틀 안에서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면서 체제에 순응해 왔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배신

국민의힘(국힘)은 이재명 정부의 개혁 배신으로 인한 환멸을 세력 만회의 재료로 삼고 있다. 국힘 지지율은 급상승했다. 국힘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반감의 반사이익이다.

국힘이 어느 우파 정당이 아니라 극우 정당으로서 재기했다는 사실을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국힘 안에서 장동혁 사퇴 요구는 완전히 사라졌다.

주진우, 이진숙, 김태규 등 극우 정치인들은 도그 휘슬(극우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은밀한 표식이나 암호)을 부는 단계를 넘어서 노골적으로 극우적 주장을 하고 있다.

주진우는 영화 〈암살자(들)〉의 주연 배우 유해진을 “북한상”이라고 좌표찍기 공격을 했다. 그러자 비제도권(장외) 극우들이 유해진 배우의 집 앞으로 몰려가 시위를 벌였다. 이진숙은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5·18 역사 부정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김태규는 전두환·윤석열 내란을 부정했다.(더 자세한 내용은 3면에 실린 ‘대북 강경론에서 영화 검열까지 ... 거침없는 극우 공세 — 이재명의 중도 보수 노선과 반우파 투쟁의 공백’을 보시오.)

이런 상황은 이재명 정부의 배신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위기가 극우의 승리로 귀결되는 것은 필연적이지는 않다.

러시아 혁명이 레온 트로츠키는 파시스트 정당을 “반혁명적 절망”의 정당이라고 썼다. 국힘이 파시스트 정당은 아니지만 대중의 절망을 먹고 자라는 마찬가지로인 극우 정당이다. 중도 정치 세력이 변화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편 마땅한 대안이 없는 듯한 때,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은 극우의 주장에 이끌릴 수도 있다.

극우에 맞서려면 진정한 희망이 중요하다. 희망의 원천은 노동계급의 대중운동이다.

우리는 독일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가 1915년에 경고했던 바 “사회주의나 야만이나”의 선택이 놓여 있는 복합 위기 시기에 살고 있다. 이런 시기에 대중 운동을 그저 의회 책략을 위한 압력 수단으로 삼아 위로부터의 개혁을 추진하려는 개혁주의자들은 진정한 희망을 제공할 수 없다.

개혁주의를 반대하는 좌파는 대중운동 건설에 베풀어야 한다.

김인식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 특별 기고 임신중지약 도입을 둘러싼 의료계 제안의 문제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여성위원회의 **고경심** 산부인과 전문의(인의협 이사)가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권 보장의 관점에서, 산부인과 단체들이 주장하는 임신중지약 도입 조건들이 왜 문제인지 살펴본다.

필자는 40년 경력의 산부인과 의사로, 2018년 낙태죄 위헌 소송 공개변론에 참여해 헌법불합치 판결에 기여했다.

“그동안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통해 숨죽이고 있던 ‘여성의 목소리’가 사회적 고통을 드러내고 발화하는 현상을 주목하길 바란다. (중략) 특히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논의에 나타나는 낙태를 둘러싼 논점, 즉 태아의 생명권과 대 여성의 선택권이라는 고식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낙태 개체인 태아의 생명권을 태아의 발달단계에 따라 구분하는 논쟁보다는, 낙태로 인한 여성의 건강상의 위해성과 안전성을 검토하고,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는 시각으로 낙태죄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기를 요청한다.”

위 글은 2018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형법 낙태죄 조항 위헌심판 당시 필자가 제출한 참고인 의견서의 끝 문장이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한 후 7년이 지나도록 개정 입법이 되지 않았다. 지금의 입법 공백 상태는 처벌 조항의 공백 상태가 아니라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입법의 부재를 의미한다.

2026년 9월 16일 정부가 임신중지약 미페프리스톤 도입을 공식화했다. 현재 이 약이 도입되면 한국은 세계 101번째 도입국이 된다. 국제적으로 수십 년간 안전하게 허가 사용되고 있는 약을 이제야 도입하겠다고 하니 만시지탄할 일이다.

정부는 내년 초 도입하게 될 임신중지약의 시행 방안에 대해 산부인과 3개 단체(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의 의견에 의존하는 모

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안전한 도입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임신 9주 이내로 사용 범위를 제한할 것,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할 것, 위해성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뒤 다음 단계로 이행하는 단계적 설계를 할 것 등 가장 엄격한 제한 조건을 주장하고 있다. 안전한 도입을 주장하지만 이면에 숨어 있는 의도는 가급적 제한 조항을 뒤 처방을 독점하고 도입을 늦추려는 방식이며 여성이 처한 현실과 필요성을 외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임신중지 임상 경험이 풍부한 산부인과 의사들이 주축이 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는 이러한 제한 조건이 여성의 임신중지 접근성을 막고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권 보장 측면에서 문제가 많은 주장이라고 본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한 조건에 반대해야

첫째, 임신 9주 이내 사용 범위 제한은 가장 짧은 일본 후생노동성의 임신 9주 기준과 같으며 다른 나라의 승인 기준은 더 포괄적이고 다양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법으로 임신 주수 상한을 두는 것에 반대하며, 12주 미만은 자가 관리를, 12주 이상은 별도 요법을 권고한다(Abortion care guideline, 2022). 실제 미페프리스톤의 효능은 10주에 국한되지 않으며 그 이상의 임신 주수에서도 자궁경부 연화, 처치 시간 단축, 안전성 측면에서 의학적 적용 근거가 있다. 지금 도입하려는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 기준은 9주, 미국 미페프렉스(미페프리스톤·미프진)는 10주이다. 허가 사항에 주수 상한을 두더라도 그 수치를 근거로 상위 주수의 사용을 원천 차단하지 말아야 하며, 주수별·적응증별 세부 사항은 허가 사항

이 아니라 학회의 임상진료지침에서 관리하는 것이 국제 표준에 부합한다. 또한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사용승인 제도’를 이용해 오프라벨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프라벨은 식약처에서 의약품의 허가 용도 이외의 적응증에 약을 처방하는 행위이다. 오프라벨 사용의 불가피성을 인정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향상하기 위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인정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하는 제안은 처방자 자격과 시설 요건에 제한을 두는 조치로 우려가 된다. 처방자 자격을 산부인과 의사 중심으로 제한할 수 없는 데, 이는 특정한 전문과목만 전문의약품 처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한국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부인과 전문의나 학회 인증자로 처방 자격을 한정하는 등록기관을 두는 것은 여성의 ‘접근성 확보’에 역행할 수 있다. 미국이나 뉴질랜드의 경우는 일반의나 가정의는 물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문간호사(NP), 조산사(CNA) 등도 처방이 가능하다. 영국은 등록 의사 2인이 사유를 확인하되 실제 상담과 처방은 일차의료를 포함해 일반의가 하고 있으며 간호사와 조산사가 투약을 담당한다. WHO(2022)는 12주 미만의 경우 지역사회보건요원, 약사, 간호사, 조산사, 준임상의, 일반의, 그리고 당사자 본인(자가 관리)까지 폭넓게 제공·관리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특정 제공자를 제한하는 규제, 초음파를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에 반대한다.

셋째, 도입 초기 2년간 의사가 처방·조제하고 이후 원내 처방과 원외 약국 조제로 전환하는 단계적 방안은 의료기관 방문 횟수와 비용이 늘어나고 산부인과가 없는 지방에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지방 의료 소멸 현실을 외면하고 있음). 캐나다의 경우 시판 후 1년 안에 처방자 교육 의무, 유통사 등록, 서면 동의가 폐지

되고 약사 직접 조제가 허용되고 초음파 검사 의무도 폐지되었다. 캐나다의 사례를 보면 규제 철폐 결정부터 시행까지 1년이 걸리지 않았고 그사이 안전성 지표에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볼 때, 엄격한 요건이 안전성 확보에 필수적이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필수 의료 서비스

넷째, 위해성관리계획(RMP)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뒤 다음 단계로 이행하는 설계를 하겠다는 주장은 식약처 허가 조건과 혼동하고 있다. RMP의 이행 주체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제조·수입업체)이며, 구성 내용은 안전성·유효성 중점 검토 항목, 의약품 감시 계획, 위해성 완화 조치와 그 효과성 평가지표다. 그런데 국가가 구축 운영해야 하는 인프라(처방자 국가 등록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연계, 학회·부처 간 협의체, 24시간 응급 이송 네트워크 등)는 민간 품목허가권자가 이행하는 RMP의 범주가 아니다. 따라서 RMP로 답을 수 있는 것과 별도 제도인 건강보험 수가 및 급여, 학회 임상진료지침, 모자보건법 하위법령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임신중지를 ‘필수의료서비스’로 규정해 의료보험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보편적인 재생산 건강권의 핵심 요소이며, 국가가 차별 없이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기초다. 고가의 의료비는 접근을 막고 시기를 지연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비보험 상태에서 관련 검사, 진료, 시술, 처방 등에 드는 비용은 60만 원에서 수백만 원 이상이며 지역과 의료기관마다 편차가 매우 크다. 특히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법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총비용이 상승했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탈세 수단으로 현금 결제만을 요구하는 불법적 관행도 늘고

▶ 9면으로 이어짐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은 투쟁이 성과를 낸다고 느낀다

권준모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조합원

지난 6월 스리랑카 출신의 현대중공업 직고용 계약직 이주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다.

사용자 측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매달 밥값 50만 원을 부당하게 공제했었다. 그런데 밥값 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임금 삭감, 연 2회 인사평가와 그에 따른 임금 차등 인상, 성과급 차등 지급, 저성과자 해고, 성과급 상한제를 포함시키는 끔찍한 수준의 근로계약서 개악 갱신을 요구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이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했다. 그 결과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에게도 투쟁에 참여할 자신감을 줬고 연대도 확대됐다.

결국 사용자 측은 부당하게 공제한 밥값을 돌려주고 성과급 차등 지급을 폐지하는 등 일부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기본급 삭감, 연 2회 인사평가와 그에 따른 임금 차등 인상, 저성과자 해고 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 이주노동자들은 나쁜계약 철회와 재계약 보장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노동자들은 집단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이 확대되고 있다.

직고용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이 성과를 낸 후, 우즈베키스탄인 노동자들이 사유를 불문하고 이직하면 매달 벌금 2,000달러를 내야 하는 인신매매 수준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며 투쟁했다.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은 노동조합을 찾아와 벌금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밥값 공제 폐지 등 일부 성과를 거두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자신감도 커졌다

고 밝혔고 최근 벌금 조항을 삭제했다고 알렸다.

필자가 만난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E-7-3 비자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노동자들이 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용은 못 보게 하고 사인만 하고 나가라고 하거나, 사용자 측이 뻔뻔하게 대놓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항의하는 이주노동자에게 재계약을 안 해 주겠다고 협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부당한 일이 시정돼, 계약서대로 임금을 받고 체불 임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기를 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에 정주노동자들도 적극 연대해 이들이 머나먼 한국 땅에 와서 겪는 고통을 줄이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단결과 연대를 위해

그런데 얼마 전 이주노동자들과의 연대를 해치는 문제가 발생했다.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인 팀장이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한 이주노동자들에게 “노조 가입하면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며 탈퇴를 종용했다고 한다.

같은 현대중공업지부 소속 조합원인데 어찌 이런 말을 하는가? 현대중공업지부 집행부는 이 사실을 무겁게 봐야 한다. 그리고 노조 탈퇴를 종용한 조합원을 징계해야 한다.

사용자 측은 이 일이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지만, 팀장들의 이런 태도는 투쟁에 나선 이주노동자들을 탄압하려는 사용자 측의 기류를 반영하는 것일 공산이 크다. 만약 사용자 측이 투쟁에 나선 이주노동자들을 재계약하지 않고 해고하는 등 공격하려 한다면 원하청 노조와 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 재계약 보장을 위한 투쟁과 연대를 신속하게 건설해야 한다.

최근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에 하청지회를 비난하는 내용의 익명 선전물도 올라왔다.

하청지회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강제 추방될 수 있고, 노조가 이주노

동자의 처우 개선에 나서면 정주노동자들이 소외된다는 주장 등이다.

그러나 투쟁에 나섰기 때문에 강제 추방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용자 측에 돌려야 할 화살을 이주노동자와 이들을 조합원으로 받은 하청지회에 돌리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주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의 이해관계는 대립하지 않는다. 우리가 노동조합으로 뭉치는 이유는 고용을 보장하고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주노동자들의 고용과 권리가 보장될수록 정주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조건 하향 압력은 약해진다. 오히려 이주노동자를 이렇게 비난할 때 노노 갈등이 심화되고 그 결과 모든 노동자들에게 조건 하향 압력이 생긴다. 반대로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단결해 모두의 권리 향상을 위해 투쟁한다면 모두의 임금과 고용을 늘릴 가능성이 커진다.

지금 조선업은 역대급 호황임에도 사용자 측은 임금 인상과 복지 향상에 소극적이다. 이런 상황은 최근 현대중공업지부 단체협상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것에서도 드러났다. 모두의 조건을 향상시키려면 정주·이주 노동자들이 사용자 측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

10월 18일 오후 2시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HD현대중공업 나쁜계약 철회·임금삭감 철회·차별처우 중단 전국이주노동자 3차 공동행동대회’가 열린다. 직고용 계약직 이주노동자 중 많은 사람들이 10월 말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 집회에 더 많이 참가해 이주노동자 투쟁에 연대하자!

▶ 8면에서 이어짐

있다. 더구나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일수록 비용 문제로 지인이나 상대 남성에게 돈을 빌리다 폭력이나 협박을 당하기도 하며, 청소년의 경우는 부모 동의를 요구 받아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또 건강보험 적용으로 체계적인 의료 질 관리를 보장하게 된다. 표준 진료 지침이 적용되고 전수 집계와 공식 통계가 가능해져 국가 차원의 보건의

료 인프라 개선과 여성 건강과 재생산 건강 개선 지표를 확보할 수 있다.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와 그로 인한 합병증(폐혈증, 불완전 유산, 불임 등)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지원하는 비용을 훨씬 초과한다. 세계 80개국 중 캐나다, 영국, 스웨덴 등을 포함한 34개국이 공공의료제도로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보조하고 있다. 따라서 지불 능

력과 무관하게 급여를 적용해 감당 가능한 비용을 일차적으로 전제하고, 별도 지원은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임신중지약 도입이 여성의 절실한 요구와 재생산권을 도외시하는 산부인과 단체의 주장에 경도되지 않고, 우리 사회에 정착을 하고 나아가 성과 재생산권 건강을 위한 입법이 만들어지는 기초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ws.or.kr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브라질 대선 1차 투표
노동자당 룰라의 패배,
극우의 약진

★ 핵발전과 SMR 그리고 핵융합
— 핵에너지 제대로 알기 1

DMZ 지뢰 폭발 사고

강경 대응은 극우 자신감 높이고 더 큰 위험 부를 것

10월 1일 국군의날에 이재명은 이 폭발을 “불의의 사고”라고 불렀다. 그러나 합참은 북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후 정부의 대응은 지뢰지대 폭파로, 여당의 표현은 “도발”로 수위가 올라갔다.

10월 3일 장외 집회에서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목청을 높인 장동혁과, 12.3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기세등등한 표정으로 호통치듯 북측의 책임을 묻는 군 장성들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진 세력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10월 5일 합참은 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묻은 지뢰 때문이라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같은 날 낮 그 지뢰지대를 폭파한 영상을 공개했다.

같은 날 민주당 대변인은 북한이 즉시 사과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국힘) 대표 장동혁은 대통령이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고 강력히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이 당장 더 큰 군사적 충돌로 번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누구 책임이냐를 둘러싼 공방은 지속될 것이다. 이는 합참이 앞으로 계속하겠다고 밝힌 MDL 이남(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지뢰 제거 작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더 심한 상호 적대 행위를 낳을 수도 있다.

예컨대 유승민은 9월 29일 페이스북에서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는 국가안보실장 김관진이 “북의 자백과 사과를 받아 냈다”며 대북 확성기 복구를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단호히’ 대응해 사과를 받아 냈다는 주장으로, 현 정부의 ‘무른’ 대응이 북측의 공격을 용인했다는 장동혁 등의 주장에 힘을 보탠 것이다.

그러나 당시 8·25 남북 공동보도문 제2항은 북측이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고 적었을 뿐이다. ‘사과’는 김관진이 보도문을 읽은 뒤 덧

붙인 해석이다. 합의 당일 북한군 총정치국장 황병서는 남측이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말했고, 8일 뒤 북한 국방위원회는 “유감”이 시인도 사고도 아니라고 밝혔다.

당시 목함지뢰 사건 직후 박근혜 정부가 보복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남북은 포격을 주고받았다.

이후 8·25 합의는 북측의 “유감”과 남측의 확성기 방송 중단을 맞바꾼 것이었다.

2015년은 북한을 압박해서 사과를 받아 낸 선례가 아니라, 확성기 재개가 포격으로 이어진 선례다.

‘10여 미터’의 기준선

합참은 폭발 지점이 MDL 남쪽 10여 미터이고 지뢰는 북한군 수지반 보병지뢰(플라스틱 대인지뢰)라고 최종 판단했다. 정황상 북측의 지뢰가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나 사건 초기에는 군 관계자들 자신도 긴가민가했다. 합참 작전1처장은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고(9월 28일), 국방부 장관은 “우리 발목지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다고 밝혔다(9월 29일 국회).

국과수는 부상자 전투복과 파편에서 북한 지뢰와 같은 성분을 확인했고, 유엔사도 인위적 설치로 평가했다고 한다. 합참은 여기에 폭발 지점의 간격과 수색대원의 진술을 종합해 판정했다고 한다.

정작 지뢰 실물이 확인된 것은 9월 29일 유엔사와의 공동조사 때 발견한 발뿐이다. 합참 관계자는 그 지뢰도 안전상의 이유로 회수하지 않고 폭파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것은 저화질 사진 4장뿐이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10여 미터’라는 거리도 논란거리다. 합참은 유엔사가 적용하는 MDL, 표지판 연결선, 군사지도상 MDL “세 가지가 상호 일치하지 않고 복잡하게 얹

서로 다른 세 개의 군사분계선(MDL) 합참 스스로 MDL 기준들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혀 있다”고 했다. 정전협정 때 세운 표지판 1,292개 가운데 지금 식별되는 것은 200여 개이고, 한국군은 2004년 미국과 함께 만든 군사지도를, 유엔사는 2016년 자체 좌표를 쓴다.

합참은 북한 측이 적용하는 군사분계선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군의 인식이 한국군과 다를 가능성은 열어 뒀다. 합참 정보분석처장은 북한군이 “표지판 연결선 또는 자신들이 적용하고 있는 MDL을 기준으로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한국군이 경고사격을 하면 북한군이 지도를 들고 위치를 확인하거나 남측을 관측하는데, 합참은 이를 두고 북한군이 MDL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군은 자신이 따로 정한 기준선 아래로 북한군이 내려오면 (경고사격이 아니라) 조준사격을 한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그 기준선은 내려오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사고 지역이 1953년 이래로 “수십 년 동안 가보지 않았”던 지역이라는 합참의 설명까지 더하면 누가 실제 군사분계선을 넘은 것인지부터가 모호해 보인다. 사건 초기 합참 관계자는 수색대가 애초 계획과 달리 경로를 바꿔 진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점들에 비춰 보면 ‘10여 미터’라는 거리도 어느 선을 기준으로 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수치다.

이런 불확실한 사실들에, 남한 측 과실로 판명 나서는 안 된다는 핵심 관계자들의 이해관계까지 더해서 보면 합참의 발표에는 여전히 의문스러운 데가 많다.

유엔사와 한국군이 수십 년 동안 들어가지 않던 지역에 왜 수색대를 들여

보냈는지도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군 스스로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이라고 한 곳에 새 수색로를 낸 작전은 유엔사 현장조사를 위한 ‘사전 여건 조성’이었다. 사고가 난 작전을 한국군에 요구한 것은 유엔사였다.

유엔사가 확인하려던 것은 북한 지뢰가 군사분계선 남쪽에 있는지였다고 한다. 있다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이유였다. 이 ‘조사’는 지뢰 폭발로 인한 두 군인의 중상으로 이어졌다. 유엔사는 9월 30일 정전협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10월 5일에는 지뢰지대 폭파가 뒤따랐다. 폭파 현장에는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관계자가 참가해 폭파를 승인했다고 합참 작전부장은 밝혔다. 유엔사는 유엔 기구가 아니라 미군 조직이다(관련 기사: 본지 573호 ‘유엔군사령부 - 한반도 평화 땀지 끌고 오히려 긴장 키우는 제국주의 군사 기구’).

그러므로 합참 발표의 근거와 이 조사의 경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이다.

적대 관계가 구조적으로 고조되는 상황에서(관련 기사: 본지 600호 ‘DMZ 지뢰 폭발 사고 - 다시 지뢰밭이 되고 있는 비무장지대’) 국힘은 공세적 대응을 요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그에 밀려 추가 지뢰 제거 작전까지 허용했다. 이는 장차 더 위험한 상황을 낳을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MDL 이남에 넘어온 모든 지뢰를 제거할 것이며 “이게 시작이라고 보셔도 된다”고 했다. 남북이 인식하는 경계선이 서로 다른 곳에서 그 작전이 계속되면 북한군과 접촉할 위험이 커진다.

이재명 정부는 모든 대북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장호중

북한군 포로 이송

비밀 외교가 왜 문제인지도 모르는 이재명

이재혁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이송 문제를 놓고 이재명 정부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젤렌스키 정부는 북한군 포로를 한국에 대한 지원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한국을 전쟁에 끌어들이려 하는 이런 시도를 규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좌파는 마땅히 이재명의 비밀 외교 정당화를 강하게 비판해야 한다.

젤렌스키의 발언 이후 이재명은 SNS에서 우크라이나의 “비공개 합의”를 거듭 비난했다. 비밀 외교가 몇몇 양 합의 내용은 쏙 빼놓고 합의 위반만 문제 삼았다.

이재명의 논리는 이렇다. 첫째, 포로 이송은 외교·안보·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민감한 사안이다. 둘째, 공개하면 당사자의 생명과 국가 안보·국익을 해칠 수 있어 비공개가 타당하다.

그런데 한반도 정세에 그토록 중대한 사안을 왜 대중에게 숨기는가? 그것이 이재명이 말하는 실용주의라면, 그것은 지나치고 고상한 표현일 것이다.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민주주의는 언제든 엇 바뀔 수 있다는 극도로 알파한 기회주의일 뿐이다.

물론 두 북한군 포로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은 비공개에 부쳐야 한다.

그러나 이들의 안전 보호와 정부 간 협상의 정치적 내용을 감추는 것은 전



들의 갈등은 친서방 안에서다

혀 별개다.

이재명은 바로 한국의 보통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려 했다. 이것은 적어도 대중의 판단력을 멸시하는 엘리트 주의이고 최악의 경우 대중의 이익과 안전에 엄청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거래를 숨기려 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서방의 편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해 왔다 (국민의힘은 이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지난 2월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우회 지원 프로그램 참가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재명은 야당 대표 시절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놓고 윤석열 정부에 외교의 진상을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안보를 이유로 한 답변 회피를 추궁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더니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큰 사안에서 비밀 외교를 정당화하고 당연시한다.

‘국익’의 실체와 진짜 수혜자

이재명 정부가 북한군 포로 이송 비공개로 명분으로 내세우는 ‘국익’은 보통 사람들의 이익이 아니다.

비밀 외교가 필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와 지배계급이다.

이재명 정부는 줄타기 외교(‘실용 외교’) 속에서 이란 전쟁 파병 추진,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검토 등 서방 제국 주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하려고,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외교적 운신의 폭을 확보하려 한다.

북한군 포로 문제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과 떼어 놓을 수 없다. 젤렌스키 정부는 북한군 참전을 부각하며 한국의 지원 확대를 요구해 왔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무기 지원, 방공 체계, 군사 정보 협력 등이 계속 거론돼 왔다.

또한 한국 지배계급은 한국 자본주의의 위상을 높이려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 같은 국제적 전쟁에서 한국이 한몫 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지배계급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들을 대중의 감시 없이 추진하는 데 비밀 외교가 유용한 것이다.

자국 정부의 전쟁 관여에 맞서기

따라서 좌파는 이재명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북한군 포로 문제를 계기로 우크라이나 정부와 어떤 군사·정보·외교 협력을 논의했는지, 왜 그 내용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지 분명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진보당이 포로와 가족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한 것은 타당하지만 “대통령과 정부 당국의 비공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대목은 문제다.

진보당은 트럼프의 대미 투자 발표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민 앞에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밀실 야합으로 처리하는 것”을 비판했다. 이런 비밀 외교 비판이 일관되어야 한다.

이재명이 “그런 거래는 없었다”고 말한다고 해도 곧이곧대로 믿어 줄 일은 아니다. 북한군 포로 문제 외에도 이재명 정부는 이란 전쟁 파병, 대미 투자, 핵잠수함 도입, 중동과 유럽 등 전쟁 지역으로의 무기 수출, 한미·한미일 군사 훈련 등 여러 중대한 대외 정책을 비공개로 추진·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 등 서방 편에서 친제국주의 행보를 확대하는 것은 국힘 등 극우의 의제들을 정당화해 주는 일이다. 이는 공세적인 극우의 기를 더한층 살려 주는 일이다.

비밀 외교 반대가 좌파의 원칙이다

비밀 외교 반대는 노동계급 국제주의에서 도출된 좌파의 오랜 원칙이다.

고전적 사례는 불세비키다.

불세비키는 러시아 정부의 비밀 외교를 단호히 반대했다. 이는 자유주의자들의 추상적인 ‘투명성’ 원칙이 아니었다. 자본주의 정부들이 지배계급의 이익과 전쟁 목적을 위한 국가 간 흥정을 노동자들에게 숨기는 것에 반대한 것이다.

즉, 노동계급 국제주의에 따라 국제 노동계급의 이익을 거스르는 자본주의 정부들의 협상·결정을 폭로하고 그것에 맞서 싸우는 것이었다.

가령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각국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방어’, ‘평화’, ‘국민의 안전’ 운운하며 전쟁을 선동하면서 뒤에서는 영토·동맹·전후 질서를 거래·협상했다. 그 사이 수많은 사병이 전쟁터에서 무참히 죽고 후방에서는 대중이 혹심한 내핍을 강요받았다.

레닌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아래서도 비밀 외교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가장 민주적인 국가를 포함해 그 어떤 부르주아 국가에서도 외교 정책이 공개적으로 수행되는 일은 없다. 어디

에서나 민중은 기만당하고 있으며, 민주적인 프랑스, 스위스, 미국, 영국에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광범하고 훨씬 더 교묘한 방식으로 이러한 기만이 자행되고 있다.”

트로츠키는 자본주의 정부들이 외교를 비밀에 부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비밀 외교는 재산을 소유한 소수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수를 속이는 데서 필수적인 무기이다. 전 세계적인 영토 병합 계획과 탐욕스러운 동맹, 그리고 음모를 일삼는 제국주의는 비밀 외교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왔다.”

1917년 10월 혁명 이후 기존 국가를 폐지하고 노동자 국가를 수립하고 나서야 차르 정부의 외교 비밀문서들과 비밀 조약들이 공개될 수 있었다. 그 결과 영국과 프랑스가 중동을 몰래 나눠 갖기로 한 사이크스-피코 협정은 제국주의적 거래도 드러났다.

트로츠키는 독일 정부와의 브레스트-리토프스크 협상에서 회의록을 공개해, ‘민족 자결’을 명분으로 포장한 독일 정부의 영토 지배 계획을 폭로했다. 그것은 독일의 노동자 형제자매를 향해 자국 정부에 맞서라는 호소였다.



9월 29일 교문 앞을 점령한 파리 근교 생드니의 고등학생들

사진 출처: Revolution Permanente

프랑스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 학생 저항으로 중도 정치가 악화되다

파리의 거리에서 만난 드니 고다르는 “지금 정말 놀라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고등학생들의 저항이 커지고 있고 노동조합들도 10월 6일(화) 행동의 날에 힘을 싣고 있다고 한다. 대선을 7개월 앞둔 가운데 학생 저항이 정치 분위기를 바꿔 놓았다. 몇몇 여론 조사에서는 파시스트인 마린 르펜이 1위, ‘불복종 프랑스’(LF)의 좌파 정치인 장뤽 멜랑송이 2위를 기록했다.

인종차별 반대 단체인 ‘연대의 행진’은 10월 24일 파시스트 국민연합(RN)의 당대회장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기로 했다. <소셜리스트 워커>가 사회주의자이자 ‘연대의 행진’ 조직자인 드니 고다르에게 오늘날 프랑스 정치 분위기에 대해 들었다.

지금 프랑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열려 있습니다. 급진화와 정치적 각성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런 흐름은 커다란 패배에 부딪히기 전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동이 동력을 유지하고 확대되고 전진하려면 ‘집중 행동의 날’로 선포된 날들 사이에도 운동을 건설해야 합니다.

화장실을 개선하라는 구호와 팔레스타인 독립 구호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현 국면의 핵심 쟁점은 예산입니다. 보건, 임금, 연금, 교육 예산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필요를 위해 돈을 써라, 보건 예산과 교육 예산을 삭감하지 말라”입니다.

운동이 전진할수록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도 커집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운동은 전국적이고, 갈수록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10월 5일 월요일 대규모 행동이 벌어질 것이고, 화요일은 최대 규모가 될 것입니다.

운동이 직면한 쟁점은 무엇인가요?

정부가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과 일 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갈라치려 한다

는 것입니다. 직업계 학교는 교외에 훨씬 많은데, 그 지역은 더 가난하고 흑인과 아랍계 학생 비중도 더 높습니다.

정부는 직업계 학교 수업을 원격 화상 수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등교 중지령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또 직업계 학교 학생들을 폭력적이라고 비난합니다.

‘불복종 프랑스’는 이 운동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연합이 7개월 뒤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처음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소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음 선거에서 정말 파시스트 정당이 이기는 것인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이 그런 전망에 맞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개 좌파 개혁주의자들은 선거가 다가오면 온건한 모습을 보이려 합니다. 그러나 ‘불복종 프랑스’는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멜랑송은 상황에 의해 급진화하고 있는 듯합니다.

9월 29일 경찰은 학교를 봉쇄하던 학생들을 노동조합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격했습니다. 같은 날 멜랑송은 “저

들이 우리 아이들을 공격하고 있다”며 경찰을 비난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멜랑송은 경찰에 맞서 학생들을 지지하자고 호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국민연합의 승리를 막을 가망이 없다면 마음에 들지도 않는 후보에게 굳이 표를 줄 필요가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뭇 다른 방침이 가능해졌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멜랑송은 자신이 그런 염원을 파고들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운동 참가자의 다수가 ‘불복종 프랑스’를 자신들의 조직으로 여깁니다. 심지어 당원이 아닌 많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청년들은 국민연합에 반대하는 ‘불복종 프랑스’의 구호를 외치고, 그런 구호가 시위에서 가장 널리 외쳐 집니다. 팔레스타인 지지 구호를 외친 뒤 멜랑송을 연호하는 식입니다.

‘불복종 프랑스’가 선거 정당으로서 운동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까요?

때로는 선거가 투쟁을 마비시킵니다. 투쟁이 잦아들게 하고 노동조합 투쟁마저 사라지게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멜랑송이 대선에서 많은 표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것이 투쟁에도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복종 프랑스’는 지역마다 행동대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우 취약하고, 얼마 전까지는 운동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번 운동을 계기로 이들은 세력을 키우려고 할 듯

합니다. 시위대 속에 ‘불복종 프랑스’의 잠재적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 행동대는 큰 대오를 꾸려서 깃발을 들고 시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불복종 프랑스’는 운동을 통제하거나 지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운동 참가자들이 ‘불복종 프랑스’의 사상을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불복종 프랑스’는 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동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시위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더라도, 승리를 거머쥐려면 혁명적 조직이 필요합니다.

‘연대의 행진’은 10월 24일 국민연합 당대회장 앞에서 맞불 집회를 조직하고 있나요?

‘연대의 행진’은 ‘불복종 프랑스’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멜랑송은 학생 운동이 인종차별과 국민연합에 반대하는 정서와 만나야 한다고 여기는 듯합니다.

그러나 현재 ‘불복종 프랑스’는 국민연합 당대회에 맞선 전국적 동원을 바라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의 당원들은 동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청년들이 우리의 주장을 경청합니다. 그러한 정서를 ‘불복종 프랑스’ 지지층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불복종 프랑스’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연합 당대회에 맞선 맞불 집회에 가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여깁니다.

준 버드